

인구소멸시대

수백조 예산 투입에도 0.7명 ‘초저출산’… 구조정책 불가피

3분기 기준 합계출산율 0.7명
경쟁압력, 주거불안 등 영향
“차별없는 제도적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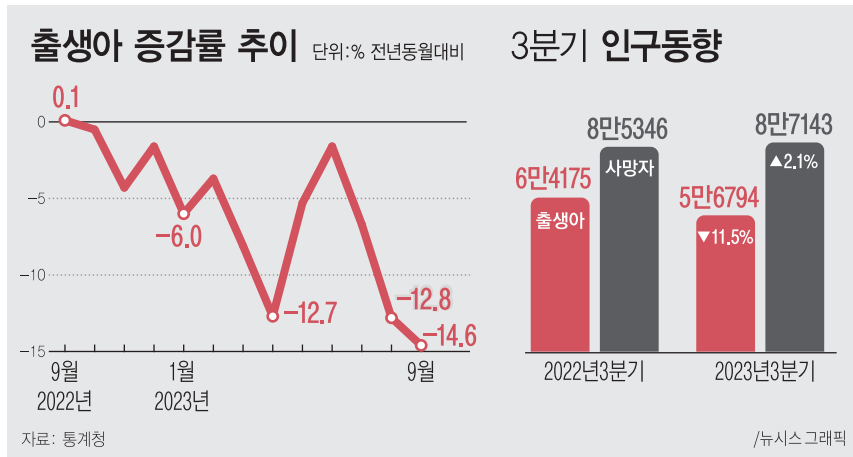
무려 21년.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로 지목된 기간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80조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외려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 지난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10년전 1.19명과 비교해 0.49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가입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한국은행은 출산율이 이처럼 낮아질 경우 2050년에는 성장률이 0% 이하가 될 확률이 50.4%에 달한다고 내다봤다. 2060년 이후에는 80.1% 수준이다. 성장률이 1% 낮아지면 일자리가 7만개가량 줄어 들고 가계소득은 0.4~0.5% 감소한다. 고령층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어 경제전반의 불평등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 경쟁압력에 고용·주거·양육 불안

한은은 3일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초저출산율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청년들의 ▲경쟁압력 ▲고용불안 ▲주거불안 ▲양육불안을 꼽았다.

우선 우리나라의 청년(15~29세) 고용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15~29세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4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4.6%)보



다 낮은 수준이다. 25~39세 고용률도 75.3%로 OECD 평균(87.4%)과 비교해 12.1%포인트(p) 낮다.

한은 관계자는 “졸업 후 첫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10~11개월로 늘지 않았지만, 대학졸업에 걸리는 기간은 휴학기간이 늘면서 크게 증가했다”며 “취업이 늦어지면서 결혼 등 생애과정의 이행도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질도 나빠지는 추세다. 15~29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1.8%에서 2022년 41.4%로 9.6%p 증가했다. 나라별로 보면 OECD의 34개국 중 네덜란드 다음으로 고용안정성이 좋지 않다.

일자리 양과 질이 낮아지면 청년들의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전국 29~39세 청년 2000명을 조사한 결과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을수록 희망 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은 그룹의 평균 희망

자녀수는 0.73명으로 경쟁압력 체감도가 낮은 그룹의 희망자녀수(0.87명)보다 0.14명 낮았다. 일자리 등의 경쟁압력이 출산율을 낮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거불안도 출산율을 낮췄다. 조사 결과 주택가격이 높은 특별·광역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일수록, 주택마련에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에게서 결혼의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부담도 한 몫 했다. 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 등 의무가 강해질수록 결혼의향이 낮고, 희망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생활비와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 편”이라며 “결혼 의향이나 희망 자녀수를 비교해봤을 때 고용 및 주거안정이 결혼·출산 결정에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아이 중심 지원체계 필요

한은은 초저출산 국가를 벗어나기 위해선 구조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일자리의 90%를 창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임금 지급여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은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1차와 2차 노동시장의 교섭력 격차 등으로 소득차가 발생해 청년들이 대기업에만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2차 노동시장의 처우수준을 높이는 구조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일관된 주택공급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한은 관계자는 “수도권 집중은 인구 밀도를 높여 경쟁압력과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해 지방의 인력과 자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일관된 주택공급 정책과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 및 위험자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수위를 조절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층(15~39세) 고용률(58%)이 OECD 34개국 평균수준(66.6%)으로 높아질 경우 출산율은 0.12명 늘었다.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화할 경우 출산율은 0.002명 증가했다.

또 가족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관련 지원예산은 2020년

기준 1.55%다. OECD 평균(2.2%)과 비교해 0.65%p 낮은 수준이다. 특히 육아휴직 관련 지출은 GDP 대비 0.07%로 OECD 평균(0.35%)의 5분의 1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육아휴직 사용률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48명, 남성 14.1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남성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GDP 대비 가족관련 지원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일 경우 출산율은 0.06명,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일 경우 출산율은 0.10명 늘어났다.

한은은 부모중심의 지원체계에서 아이중심의 지원체계로 정책지원의 시각이 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청년 중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012년 29.8%에서 2022년 39.6%로 증가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많은 유럽국가에서도 혼인 외 출산비중이 상승하면서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가정의 형태(비혼출산 등)에 관계없이 아이가 태어나면 차별없이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국민 평균연령 44.7세… 올해만 10만명 이상 인구 감소

11월말 5133만명… 전월비 1.7만명↓
출생아 수, 사망자 절반 수준 머물러

지난달 전국 인구가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인구는 올해 들어서만 10만 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인구는 5133만 명으로, 전달에 비해 1만7150명 줄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월별 감소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

지 5000명~9000명 선을 유지하다 10월(-1만5775명)과 11월에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말(5143만 명) 대비 전국 거주민 수가 10만1900명 줄었다.

지난달 국내 17개 주요시·도 가운데 서울(-9324명)이 압도적으로 큰 감소폭으로 보였다. 부산(-2717명)과 경북(-1823명)이 그 뒤를 이었다. 또 경남(-1620명)과 전북(-1112명) 등이 1000명 이상의 감소를 나타냈다.

11월 인구는 경기(+295명)와 인천

(+3216명), 세종(+177명), 충남(+1028명)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10월에 비해 뒷걸음질쳤다.

또 고령화 흐름 속에 국민 평균연령의 45세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44.7세였다. 평균연령은 2018년 11월에 42.0세, 2013년 11월에 39.5세, 2008년 11월에 37.0세였다. 여자(올해 11월 기준 45.9세)의 경우 이미 45세를 넘어섰다. 남자는 43.6세였다.

행안부에 따르면 0~9세 인구는 334

만 명으로, 50대(866만 명)의 2/5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은 70대(395만 명)보다도 적었다.

10대 인구도 465만 명으로 20대(621만 명)와 30대(657만 명), 40대(794만 명)에 비해 한참 적었다. 또 20대·30대 역시 60대(762만 명)보다 각각 적었다.

지난달 출생아 수는 1만8405명으로 사망자 수(3만561명)를 크게 밑돌았다. 출생아 수는 올해 9월(1만7926명) 역대 최저를 기록한 뒤 10월(2만346

명)에 반등했으나 11월에 다시 2만 선 밑으로 떨어졌다.

출생아 수는 5년 전(2018년 11월)에 2만6105명, 10년 전(2013년 11월)에 3만3348명, 15년 전(2008년 11월)에 3만6111명이었다.

또 혼인율 감소,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지난달 국내 1인가구(세대) 수가 992만 개에 달했다. 전체 가구(2390만 개)의 41.5%가 1인가구였다. 이어 2인가구(585만 개), 3인가구(403만 개), 4인가구(315만 개), 5인 가구(74만5000개)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전체 가구 446만 개 중 198만 개가 1인가구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일각선 총파업 가능성 거론

》1면 ‘거부된 노란봉투법…’서 계속

한국노총도 여당과 이정식 노동부장관에 책임을 묻으며 노동개악과 탄압에 맞서겠다는 내용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따로 집회를 여는 대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대표급 회의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항의에 나섰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노사정 대표들이 모이는 국내 유일한 소통

창구다.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 등 중요한 사회적 사안을 결정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 이미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이던 시절부터 불참해왔고,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만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일단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일시적으로 불참한 것일뿐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이 정부 투쟁과 사회적 대화를 별개로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일주일 뒤에는 한국노총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시행되는 만큼 한국노총이 파행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노총이 불참한 부대표자 회의는 이달 중순 열리는 대표자 회의를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자리, 자칫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총파업’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노총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 2, 3조, 방송3법 즉각 공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및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해 강경한 대응을 예고해왔다고 확인했고,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총

파업’과 윤 대통령 퇴진 집회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재용 기자 juk@